

“正確한 미래예측과  
適切한 계획이 관건”



金 明 子

〈淑明女大 理科대학장〉

“문화적 수입품”으로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지 불과 삼십여년, 우리의 과학기술 진흥은 어떻게 방향이 잡혀야 하는 것 일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빠른 시일 내에 극히 제한된 자원으로 선진국 진입을 이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보, 둘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셋째, 가용자원의 시스템화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 넷째, 정책수잔의 목표 지향적 체계화와 산업기술 혁신의 지원 강화, 다섯째, 개방과 국제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개발의 국제적 전개, 여섯째, 지역화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전국적 확산 촉진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한 기본 모양으로서 사회 전체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학기술 지향의 풍토 조성이 강조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전국민의 과학화 사업”이란 용어가 재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과학인구의 저변확대나 과학 대중화의 사업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은 科學史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1950년 말의 미국, 1957년도 소련의 Sputnik I 발사에서 자극받은 미국 사회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는 가운데, 1958년 10월에는 NBC-TV 아침시간에 물리 및 화학강의가 “Continental Classroom”이라는 프로그램 방영됐던 사례로 당시의 술한 에피소드 중의 하나로 꼽힌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관련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며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실천하는 일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작금에 이르고 그 내적인 발전과 더불어 과학 외적인 요소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극히 다루기 난해한 상태로 진화되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도 이제 과학기술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과학의 전문 분야로 성숙시키고, 그 분야의 성취가 과학기술 진흥에 되먹임되는 회로의 장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구체적 수행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맡은 행정부서가 구심점이 되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